비용 묻지도 수요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 구매

전남도 출자·출연 연구기관 '먼지 쌓인 1000억 장비' 실태

테크노파크·생물진흥원 사용료 수익 10%대 불과

환경진흥원 개원도 전에 45억원 어치 장비부터 구축

관리인력 인건비 적자가중 산자부 평가원 심의도 문제

전남도의 출자·출연을 통해 설립된 연구기관의 무분별한 장비 구매에 대한 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장비를 구입하고 관련 인력까지 채용했으나, 이후 관련 산업 침체,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쓸모 없어진 장비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특히 면밀한 검토 없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만큼 현재의 장비 구입 체계에 대한 재검검이 시급하다.

◇1000억원 장비…사용료는 10분의1도 안 돼=2005년 3월 4억4000여 만원의 '제타전위측정기'를 구매하기 시작한 전남테크노파크 산하 6개 센터는 10년간 453억 여원을 투입해 장비를 구입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10년간 얻은 사용료 수익은 54억46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용료가 장비 구매비를 넘어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432억6000여만원의 장비를 구축한 생물산업진흥원의 지난해 장비 활용 수입금은 49억2400여 만원으로 10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비 관련 인건비로 매달 2억28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 장비가 늘어날수록 적자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66억5700여만원의 장비가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도 3년간 장비 사용으로 얻는 수익이 2억2500여만원에 불과하며, 환경산업진흥원은 45억8000여 만원의 장비만 구축해놓고 개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들 기관의 운영적자는 갈수록 쌓이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와 생물산업진흥원의 2013년 당기순손실은 각각 85억3100만원, 120억900만원을 기록했다. 또 녹색에너지연구원은 10억3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지원만 하고 관리체계 미비, 허술한 시스템=전남도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관리는 예산담당관과 정책기획관실이, 평상시 운영관리는 창조산업과가 전남테크노파크와 생물산업진흥원, 에너지산업과가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보존과가 환경산업진흥원 등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통합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장비 구매 등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어렵고, 다만 장비 구매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심의 기준이 강화됐지만, 심의위원들이 지역 실정과 관련 지역산업 여건을 숙지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당수 심의 안건이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 내 장비 구축이 필요한 것인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테크노파크 등은 장비 가동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업 지원 등 다른 용도 사용 불가 ▲관련 생산업체 부재 ▲시제품제작 지원 ▲관련 산업 침체 등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고흥 고분자센터의 경우 17개 장비 가운데 8개 장비가 풍력 블레이드 생산 전용 장비로, 전남지역에 생산업체가 없어 다른 지역 기업에 사용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수요도 없는데 장비만 구입한 것이다.

◇지역대학, 연구기관 협력 속 장비 체계적 구매해야=일각에서는 이들 연구기관들이 기관 위상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분별하게 장비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대학이나 다른 기관과 연구대상, 사업 등이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 논리'에 의해 장비를 구매해 인력을 채용하는 등 '몸집 키우기'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법인이 설립된 환경산업진흥원의 경우 진입로도 없이 장비만 구입해 놓는 등 연구기관들이 '장비 구매'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전남지역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전남도의 컨트롤 하에 이들 기관들이 장비를 구입해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문건으로만 장비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임을 위한…' 5·18기념곡 지정하라 김영진 전 국회의원(가운데) 등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군구 폐지 재검토 촉구 단체장 출신 새정치 의원 간담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주승용 의원 등 민선 기초단체장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지방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의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과 특별·광역시장 권한 비대화 등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시군구의 복지비 부담이 급증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둔화하는 등 시군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복지재정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규격에 대한 입법상의 결함을 조례로 보완하려 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어 20년간 손을 쓰지 못해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 생활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고,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에 발맞추어 진정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에서 조 대표회장을 비롯, 염태영 수원시장(사무총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서울협의회장), 새정치연합에서 주승용·원혜영·백재현·신정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포스코건설 '100억 비자금' 수사 전·현 경영진 줄소환

국내 유입 경로 등 집중추궁 기업 인수·탈세의혹도 수사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 측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일요일인 지난 15일부터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우선 조사 중인 의혹은 베트남에서 건설사업을 벌이던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베트남 건설사업 추진이나 관련 회계업무 등을 담당했던 전·현직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을 조사실로 불렀다. 소환된 사람들 중에는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 상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의혹을 별도로 조사할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개인 비리로 결론 내고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했지만, 검찰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소환 조사에 앞서 수사팀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자체 적발한 회사 내부 감사자료를 확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해당하는 시기에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포스코건설에 그치지 않고 그룹 전반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포스코그룹이 전 정권 시절 과도하게 계열사를 늘려 경영이 부실화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07년 포스코 자회사 수는 20여개에 불과했으나 2012년엔 70개를 넘어섰다.

포스코가 2010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인수 과정을 둘러싸고 '정권 실세 개입 논란'이 일었던 성진지오텍이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2013년 9월 포스코P&S를 세무조사하고 나서 탈세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 등도 특수2부에 배당돼 있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